

이의는 7일 안에 낼 수 있는데 무엇을 근거로 다투나

8주 초과 치료의 서류·접수·통보기한은 공개됐지만 필요성 판단기준은 '의학적 견해'로 남아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의료심사위원회 포털의 청구안내·처리절차·FAQ와 시행령을 대조해 첨부 원고 이후 공개된 기한과 제출방법을 반영했습니다.

발행	2026.08.27	연번	2026_62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8.27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 제도의 핵심을 8주라는 숫자보다 두 번의 7일에서 찾는다. 환자는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자료를 내고 결과 통지 뒤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절차는 공개됐지만 어떤 소견과 기능제한이 계속 치료를 필요하게 만드는지 공통 판단표가 보이지 않으면 이의권은 서류를 다시 내는 권리에 머물 수 있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자료를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결과에는 통지일부터 7일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지만, 공개 안내는 치료 필요성을 가르는 세부 판단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정해진 자료를 보험회사 등에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희망자
첫 제출기한	사고일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 등에 제출
필수자료	동의서·진단서·진료기록지·영상 CD	영상검사가 있는 경우 CD 포함
결과 통지	자료 접수일부터 7일 이내	보험사와 환자에게 통지
이의기한	결과 통지일부터 7일 이내	온라인 또는 보험사를 통해 신청
시행 대상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기존 사고에 소급하지 않음

필수자료 외에도 소견서·검사 판독지·재활 물리치료기록지·간호기록지 같은 의학자료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CCTV·블랙박스·차량파손사진·상해위험분석서를 사안에 따라 낼 수 있습니다. 의료심사는 진단명만이 아니라 치료기록과 사고자료를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공식 FAQ는 보험사가 신청하면 사무국이 24시간 뒤 접수 처리를 시작하며, 접수 전에는 환자가 본인인증을 거쳐 자료를 추가할 수 있지만 접수 뒤에는 추가 제출이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7주 기한만 맞추는 것과 검토에 필요한 기록을 빠짐없이 넣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일부터 7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에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첨부 원고에서 미공개로 분류했던 이의기한과 제출창구는 이제 공식

포털에서 확인됩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종전에는 경상환자의 장기치료를 보험사가 계속 지급하면서 치료 필요성을 사후에 다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 절차는 8주를 넘기기 전에 환자 자료를 모아 독립된 의료심사위원회가 치료기간을 검토하도록 순서를 바꿉니다.

환자가 보험사에 자료를 내면 보험사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청구하고, 위원회 소속 의사가 의학적 견해를 작성합니다. 환자는 신청 당사자이면서도 최초 청구는 보험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자료를 언제 넘겼는지, 위원회가 언제 접수했는지가 기한 계산에 중요합니다.

재심은 최초 심사와 별도의 불복 절차지만 공개 포털이 제시한 핵심은 제출기한과 서류목록입니다. 통증 지속, 기능 제한, 영상소견, 치료 반응을 어떤 기준으로 가중하는지에 대한 세부 판단표는 공개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록이 심사자에 따라 다르게 읽힐 가능성을 줄이려면 익명 결정례나 기준 공개가 필요합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환자는 7주 안에 자료를 내지 못하거나 접수 전에 보완하지 못하면 8주 이후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거나 본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료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치료비를 부담할지 다투는 절차입니다.

보험사는 환자가 낸 자료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내고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를 처리합니다. 전달 지연이나 누락이 생기면 환자의 치료 연속성과 보험사의 민원·분쟁 비용이 함께 커집니다.

의료기관은 진단서 한 장보다 경과기록·기능제한·치료 반응을 시간 순서로 남기는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진료 필요성이 있어도 기록에 남지 않으면 심사자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치료 필요성의 세부 기준

공식 안내는 위원이 의학적 견해를 작성한다고 설명하지만 진단별 권고기간, 기능제한, 호전 정도를 어떻게 조합하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02 · 재심의 독립성

재심을 누가 맡고 최초 심사자와 어떻게 분리하는지, 환자가 최초 판단의 이유를 어느 범위까지 받아보는지 공개 안내만으로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03 · 기한을 놓친 환자의 구제

중증화·입원·인지곤란처럼 7주 안에 자료를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예외와 보완기간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실제 운영과 결정례를 봐야 합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 사고일을 기준으로 7주째 날짜와 결과 통지일부터 7일째 날짜를 각각 기록합니다. • 진단서뿐 아니라 진료기록·검사 판독·재활기록과 사고자료를 접수 전에 한 번에 제출합니다. •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서의 이유를 확인해 같은 자료를 반복하기보다 빠진 기능제한·치료반응 자료를 붙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대상회사	• 보험사는 환자 자료의 수령시각·위원회 송부시각·접수번호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깁니다. • 의료기관은 증상 호소만이 아니라 객관적 검사, 일상 기능제한, 치료 전후 변화를 진료기록에 남깁니다.
당국	• 진단별 획일 기준을 만들지 않더라도 판단요소·가중사유·대표 결정례를 익명 공개합니다. • 재심 담당자의 분리, 결정 이유의 제공범위, 불가피한 지연 사유의 예외기준을 명문화합니다.

갈림길

7일의 이의권이 실질적인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세부 판단요소, 최초 결정 이유의 제공범위, 재심 담당자의 독립성과 예외기한

A 이유와 결정례가 공개된다 환자가 어떤 기록이 부족했고 어떤 의학적 요소가 부정적으로 평가됐는지 알면 7일 안에 쟁점을 좁혀 실질적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 결론만 통지된다 치료 필요 또는 불필요라는 결론만 받으면 환자는 무엇을 보완할지 모른 채 같은 서류를 다시 내게 되고 재심은 형식 절차가 됩니다.
--	--

어디를 보면 아는가 · 9월 10일 시행 뒤 공개될 의료심사 통계, 익명 결정례, 결과통지서 서식과 재심 처리기준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3개의 연결 지식

[피해구제 자동차보험 보상 분쟁 대응 ↗](#)

[금융상품 자동차보험\(개인용\) ↗](#)

[넥서스 브리프 시가 의심 건으로 분류한 청구를 계약자는 알 수 있나 ↗](#)

근거와 검증

확인한 사실·숫자 5건

01	1차 ·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사고일부터 7주 이내 제출, 필수·사안별 자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청구안내 · 확인 2026-08-27 원문 열기 ↗
02	1차 · 위원회 접수·검토·통지와 재심의 사건처리 흐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사건처리절차 · 확인 2026-08-27 원문 열기 ↗
03	1차 · 접수 전 자료 추가, 접수 후 추가 제한, 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재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FAQ · 확인 2026-08-27 원문 열기 ↗
04	1차 · 8주 초과 치료자료 제출과 검토청구의 법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 · 확인 2026-08-27 원문 열기 ↗
05	1차 ·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과 2026년 9월 10일 시행 대상 안내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8주 초과 치료 절차 정책안내 · 확인 2026-08-27 원문 열기 ↗

추적 예정	2026년 9월 10일 시행 뒤 최초 심사·재심 건수, 처리기간, 결과 분포와 결과통지서의 이유 기재 수 준을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첨부 원고 작성 뒤 공식 업무포털이 공개한 사고일부터 7주 이내 제출, 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재심, 제출창구와 보완 제한을 반영했습니다. 미공개로 적었던 절차는 삭제하고 남은 쟁점을 판단기준과 결정 이유로 좁혔습니다. 공개 순서에 따라 제62호를 부여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국토교통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보험회사의 공식 입 장이 아닙니다.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나 개별 보험금 분쟁의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 습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